



KNSI 특별기획 제20-4호

## 러시아 권력승계의 특징과 한-러관계 전망

박상남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I. 제기되는 의문들
- II. 러시아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 하는가
- III. 80% 지지와 70%의석 확보, 푸틴 신드롬의 실체
- IV. 세습적 권력승계와 푸틴의 총리 취임
- V. 한-러 관계 전망과 제언

### I. 제기되는 의문들

최근 권력교체 과정에 있는 러시아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관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러시아 정치체제의 특징과 전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둔 한-러 양국의 관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러시아 정치체제는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가? 임기 말 임에도 80%에 이르는 푸틴에 대한 지지도와 2007년 12월 총선에서 70% 의석 확보라는 유례 없는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후계지명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세습적 권력승계’ 방식과 ‘전직대통령의 총리 취임’ 등 러시아적 정치 현상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답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체제는 제3세계 개발독재유형, 즉 쿠데타 또는 사후 추인선거로 등장한 독재정권이 국가주도로 국민경제자원을 특정분야에 집중함으로써 허약한 정당성을 채우려는 유형의 정치체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료, 자본, 군부 간에 성립되는 계급동맹에 의한 조합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결여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었다. 또한 권위주의체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서도 국가기구를 동원해 시민사회 내의 반대세력 배제와 선거보이콧을 통한 정책자원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요약하면 권위주의체제란 중앙집권적 통치와 강제에 의존하여 정치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배타적 지배유형이며, 이를 위한 억압적 국가기관들이 잘 정비되어 작동하는 정치체제이다. 특히 국가가 이익집단이나 정치집단까지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할 때 정치적 다원주의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며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그동안 푸틴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이러한 권위주의 유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친과 푸틴 정권이 선거를 통해 등장했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정당간의 경쟁이 가능하며 의회가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러시아 정치체제는 제3세계 개발독재 권위주의 유형과는 분명히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시각에서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투표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중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치세력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상존한다. 더욱이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 또는 실종되었으며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선거를 통한 엘리트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난 2004년 대선과정에서 언론과 올리가르히, 권력정당(Party of power)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총력적인 지원을 받은 푸틴만이 유일후보처럼 부각되었고 여타 후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조차 없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선거였다.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은 2007년 12월 총선으로 이어졌고 2008년 대선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960-7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제3세계 개발독재 권위주의 유형과 엘친, 푸틴 정권의 유사점은 인격화된 권력, 사회의 관료주의화, 정치에서 대중의 배제, 경제안건 상정에서 테크노크라트들의 주도, 활발한 정보활동(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군부가 이 역할을 함) 등이 그것이다. 2006년 통과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를 규제하는 NGO법안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시민사회의 자생력을 억압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푸틴 정부의 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와 국유화는 사회적 비판기능의 위축은 물론 정치엘리트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 집권자와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여론이 왜곡 또는 과장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론형성과 대중의 다양한 정치참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체제 이행에 따른 러시아 정치체제에 대한 다양한 성격규정이 있어왔는데, 우



선 헌팅턴은 러시아 정치체제를 ‘행정부의 월권(executive arrogation)’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불러왔으며, 러시아가 민주적 이양이란 ‘제3의 물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에 적어도 옐친 시기는 러시아가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했고, 이러한 미성숙한 민주주의는 결국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푸틴 집권 2기가 끝나는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를 ‘전제주의 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정치적 회색 지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러시아 연구자 Diamond와 Lilia Shevtsova는 포스트 전제주의 정권인 푸틴 체제는 ‘민주주의적 형태만을 채택하거나 적어도 흉내 내야만 하는 국내외적 압박에 의해 형성된 체제’라고 말한다. 결국 러시아는 정당 간의 선거 경쟁을 포함한 민주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전제주의나 관료주의, 과두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일 뿐 실질적인 정치 과정은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며 진정한 엘리트 간 선거경쟁이 불가능한 ‘모방 민주주의’(Imitation democracy)라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권위주의가 처한 딜레마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구축한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소련 시기처럼 정당과 이념적 군주 정치가 체제를 정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적 정당성과 인기에 손상을 주면서까지 더 강력한 권위주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규칙에 따라 다른 정치세력과의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방법상의 긴장이 결국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동시에 모방하면서 생존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만으로는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 그 어느 쪽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 러시아는 정치적 모순이라는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Lilia Shevtsova는 현재 푸틴의 리더십은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나, 실상은 자신도 관료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초 대통령제를 활용하여 생존하는 관료주의 제도의 불모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 다수가 국가의 안정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 푸틴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구 소련 붕괴 후 만연했던 범죄와 약탈경제를 바로 잡고 경제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방의 우려와는 다른 러시아인들의 정서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시민사회발전 정도, 정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푸틴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이 푸틴체제를 별 거부감 없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정치체제는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이성과 유사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사 권위주의’, 또는 ‘모방 민주주의’ 정도로 지칭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보다 세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요구되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 Ⅲ. 80% 지지와 70%의석 확보, 푸틴 신드롬의 실체

2007년 12월 2일 러시아 총선은 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푸틴 집권 8년에 대한 러시아 유권자들의 신임투표의 성격이 더 강했다. 친 푸틴 정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난 이번 총선 결과는 ‘강한 러시아 부활정책’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에도 이러한 정책노선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의석배정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자격이 7% 이상의 득표율로 강화되어 치러진 관계로 4개 정당만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푸틴의 친위당인 ‘통합러시아’가 64.3%를 득표했으며 나머지 3개 군소정당이 27.5%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소 정당중 하나인 ‘정의러시아’ 역시 친 푸틴노선임을 감안하면 푸틴의 의석 지배는 70%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제 1야당인 ‘공산당’은 별다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파 간의 견제와 경쟁이라는 의회 민주주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총선승리로 푸틴은 하원의 개헌 정족수를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입법부를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3선 연임금지규정에 의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푸틴은 자신의 연명처럼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총선 압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80%에 이르는 푸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러시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푸틴에 열광하게 하는가?

여러 요인 중에서도 푸틴 집권 이후 가시화 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국가 기능강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러시아 1인당 GDP는 7년 전에 비해 여섯 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한 1998년 경제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러시아는 현재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로 세계 3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눈부신 부활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라는 행운이 가져다 준 결과이지만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국유화 정책과 국가주도의 계획경영, 국영기업들의 규모 확대를 통한 단시간 내의 경제성장 추구,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한 정치안정과 일사불란한 추진력 등으로 요약되는 푸틴식 통치방식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집권 8년 동안 국가발전전략에서 푸틴은 전임자 옐친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옐친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올리가르히드의 사인(私人)화를 통해 소비에트 산업구조를 해체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신자유주의에 기반 한 이러한 급진적 경제정책은 대다수 러시아인들의 가정경제를 붕괴시켜 극빈층으로 내몰았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국부유출을 가져왔다. 일반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들이 붕괴되고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은 러시아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혼란과 시련이었다.

옐친시기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목격한 푸틴은 집권초기 완화된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다. 푸틴은 옐친 시기 이미 사유화된 주요 산업에 대한 재국유화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강화하고 파탄상태에 있던 국가경제를 빠른 시일 안에 회복시키고자 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견줄 수 있는 석유가스 에너지 산업과 러시아 유권자들의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실로비키<sup>1)</sup>들을 묶은 에너지-실로비키 복합체를 통해 러시아 부활의 추동력을 얻으려 했다. 푸틴의 이러한 ‘국가자본주의’는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통치방식이다. 이러한 푸틴의 통치방식은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강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능 강화를 통해 최단 시일 내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통치방식이라는 푸틴정부의 설명에 80%에 가까운 러시아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 IV. 세습적 권력승계와 푸틴의 총리 취임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푸틴은 자신의 오랜 심복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사실상 지명하였고 자신은 차기 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흥미로운 러시아적 정치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권력승계 또는 리더십 교체과정에 있어 정통성(legitimacy) 확보는 통치체제, 통치권력 안정에 핵심적 요소이다. M.베버는 이러한 정통성 확보를 위한 3가지 요건으로 전통(傳統)과 카리스마, (제도적) 합법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명확하게 분리되기보다는 혼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실로비키(силовики)는 힘, 권력, 폭력을 의미하는 실라(сила)가 어원이며, 러시아에서 舊KGB, FSB(해외정보국), 내무부(MVD), 군, 검찰, 국세청 등 권력부서 출신 인사들을 통칭한다. 주로 안보와 무력부처 출신들이 해당되며, 실력자 내지 세력가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자를 지칭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러시아 비밀경찰인 체카(Cheka)를 본떠 체키스티(Chekisty)와 비슷한 의미로도 통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의회민주주의에서는 리더십의 결정과정이 입후보와 선출이라는 ‘합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때 정치권력 또는 정치지도자의 정통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권력 승계과정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합법적 요소 이외에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전임자에 의한 ‘후계적 정통성’<sup>2)</sup>이다. ‘후계적 정통성’은 두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데, 첫째는 주로 전임자의 언명 또는 유서에 의한 후계지명을 통한 적통 계승, 둘째는 전임자의 이념적 해석과 정책노선의 계승 여부이다. 러시아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후계적 정통성’은 왕권이 세습되던 제정러시아시대가 몰락하고 등장한 소비에트시기에도 지속되었다.

1922년 뇌졸중으로 실질적인 권좌에서 물러났던 레닌이 1924년 사망하자 빈소로 달려온 스탈린을 비롯한 그의 부하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후계지명에 관한 레닌의 유서였다. 당시 비공개 처리된 유서에서 레닌은 집단지도체제를 희망하였으나 스탈린은 정치국의 추천과 중앙위원회 의결이라는 제도적 정통성 확보를 통해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레닌의 명확한 후계지명이라는 ‘후계적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권좌에 오른 스탈린의 불안감은 잠재적 정적들인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부하린에 대한 잔인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붉은 광장에 안치하고 소비에트 전역에 자신과 레닌의 사진을 함께 걸게 한 것도 레닌의 ‘후계적 정통성’을 스탈린이 계승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이후 소비에트시절 리더십 교체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집단적 결의 형태를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임자의 ‘사적 의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구소련 붕괴 이후 체제 전환된 러시아에서도 이러한 ‘후계적 정통성’ 전통은 계승되고 있다. 1999년 8월 9일 병든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푸틴을 그의 통치기간 중 마지막 총리로 지목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 옐친은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으며 다가오는 밀레니엄 시대에는 젊은 지도자에 의해 러시아가 통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푸틴을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당시까지 푸틴은 대권후보로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거나 정당 활동 또는 의회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정치 신인이자 베일 속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후계지명이라는 전임자의 프리미엄을 받은 푸틴은 일거에 유권자의 집중된 관심을 받으며 총리라는 유리한 활동공간과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러시아 권력승계 과정은 정당들 또는 정파들 사이의 경쟁보다는 권력 내부의 후계 지명에 의해 정권이 계승되는 ‘캐비닛 권력승계’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2)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확보가 리더십교체과정에서 충분조건이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전임자의 프리미엄에 의한 사적인 후계지명, 또는 이념적 계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러시아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난 요소를 합법적 정통성과 구분하여 ‘후계적 정통성’이라고 칭하였다.





2008년 대선 역시 이미 푸틴이 지명한 메드베데프에게 이러한 ‘후계적 정통성’과 ‘캐비닛 승계 방식’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또 하나의 러시아 정치상황은 절대적 통치권을 확립하고 현대 러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국민적 열망을 받고 있는 푸틴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종료 후 다시 총리로서 입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도 다소 혼란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푸틴입장에서 총리직은 임기와 횡수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통치력을 유지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지도 모른다. 이미 총선승리로 절대 다수의석을 장악하였고 최측근을 명목상의 대통령에 지명함으로써 양 날개를 단 푸틴은 총리 이상의 권력으로 일정 기간 실질적인 통치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측면에서 푸틴 총리가 현실화된다면 러시아 정치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구조에 있어 제2의 권력 중심(총리)이 창출되어 러시아 정치의 다원성이 한 단계 진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러시아 내부 분석이다.

## V. 한-러 관계 전망과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기 러시아 정부는 푸틴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정부가 표방한 ‘동맹실용외교’는 노무현정부의 ‘균형과 자주외교’ 노선과의 차이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러 간 주요 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에너지 분야, TKR-TSR 연결사업, 동시베리아 극동개발사업 등에서 양국 협력의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가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한미외교 복원, 한일관계 개선, 한중 경제외교 확대, 한러 자원외교 활성화라는 4강외교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을 러시아가 자국에 우호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비우호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한-러관계의 협력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과 이로 인한 남북, 북미 관계의 진전 여부이다. 만약 핵 불능화 작업 등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수교가 가시화 된다면 한-러 관계 역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셋째, 북-러 관계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이다. 최근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대한반도 영향력의 증대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대미, 대중, 대일 외교에서 중요한 지렛대인 대 북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러 간에 논의되고 있는 TKR-TS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간 철로 보수, 나진항 시설 보수 및 항구 사용문제,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수리, 중유 공급 등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의 틀 안에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08년 미국 대선의 향배 또한 한-러 관계를 전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은 이러한 상황전개를 고려하면서 유연성 있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 정부의 외교 담당자들에게 2가지만 당부를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세계전략을 먼저 설정하라는 점이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익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한국의 세계전략에 맞는 세밀한 대외정책 수립만이 단편적이고 분절된 정책에서 오는 예견된 실패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남긴 성과들은 계승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 러시아 정책에 있어 노무현 정부의 ‘균형과 자주외교’가 남긴 성과 중에 하나는 바로 한-러 간의 신뢰구축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러시아가 한국을 외교정책에 있어 자율성을 가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양국 간에 형성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이명박정부가 대러시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자원외교 활성화’의 성공 여부도 이제까지 쌓아온 양국의 신뢰가 지속되는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임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2008/01/23)

